

‘보수 연대’ 외치는 국민의힘, 개혁신당에 적극 러브콜

주황색 넥타이 매고 손 내민 장동혁
계엄 사과·쇄신안 등 외연확장 나서
이준석, 야3당대표 연석 회담 제안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에 손 내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연대’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모집하며 6·3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며 ‘보수 연대’의 필요성을 점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심판론을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외연 확장 전략으로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다고 해도, 개혁신당이 후보를 내서 중도보수 지지층의 표를 받으면 박빙인 선거구에서 승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시절, 국민의힘과 전신 보수 정당 최초로 30대에 당 대표에 오르는 등 청년층 남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사과하고 당 쇄신안을 내놓는 등 외연확장 전략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두 정당의 선거 연대가 실현될 지, 어떤 방식으로 연대가 이뤄질 지도 관심이 모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당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하며 정치권을 술렁이게 했다. 보통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중요 행사에서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나오는 것과 달리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나온 장 대표가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회에서 “폭넓은 정치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만남을 위해 물밑 조율을 나섰다고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당 내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만큼 추후 만남에서 연대 조건과 구체적인 내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최대 가전 행사 ‘CES 2026’에 참가했다가 귀국한 이준석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한 ‘야당 대표 연석 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야당 대표 연석 회의를 두고 “민주당의 전채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동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돈공천이라는 명징한 혐의 앞에서도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면서 “통일교 특검도 시간만 끌며 묻개지고 있다. 여당이 이렇게 법치를 형해화하는 것을 오래 지켜볼 수 없다. 김병기·강선우 동공천이 민주당의 어디까지 퍼진 병증인지 뿌리째 뽑아내고 일벌백제하려면, 강도 높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보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

나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에 이미 회동이 얘기된 바 있었고, 이후에 조국혁신당과의 회동까지 제안한 것”이라며 “원내에서 그 부분을 좀 더 논의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태도도 살펴보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양측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자회담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3자 회담 제안에 대해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3자 회담 구체적 일정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이 대표의 제안에 부정적 반응이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실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며 돈공천 문제와 관련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언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게 ‘도주료’를 제시하려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은 부적절하다. 정치 개혁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이혜훈 청문회, 하루에 끝낸다… 野 낙마 ‘정조준’

국힘, 재경위에 이종욱·박수민 투입
민주당, 잇단 의혹에 부정 인식 커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지정하며 강도 높은 청문을 준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는 등 이 후보자는 험난한 청문회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구를 당협위원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각종 보좌진 갑질 의혹과

재산 형성 과정을 추궁하며 최소 이틀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재경위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오는 19일에 청문회를 진행하고 여야 위원에게 늦은 시간까지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혜훈 낙마’를 위해 의원들을 재경위에 사·보임 시키면서까지 전력을 강화했다. 기존 유상범·이인선 의원이 빠지고 경제 관료 출신인 이종욱·박수민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의혹이 총 20가지나 된다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대통령실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 국민은 더 이상 이혜훈 후보자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며, 갑질과 폭언이 담긴 그 목소리 또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적격자를 추천·재가해 놓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인사 검증 실패를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책임 회피”라며 “최종 인사관자인 대통령이 이 사안을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이는 검증 실패에 대한 묵인에 다름없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추가 파악해서 제기한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인턴 보좌 직원 폭언 및 보좌진 사적 심부름 동원 ▲아파트 청약점수 뺑뺑이 의혹 ▲반포 아파트 재산신고 축소 의혹 ▲영종도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 ▲배우자

의 검직금지 위반 의혹 ▲장남 논문에 아버지가 공저자 등재로 ‘아빠’ 찬스의 의혹 등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청문회까지는 가는 모습이지만, 이 후보자의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6~8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1.6%,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유권자 10명 중 5명은 갑질·투기 논란 등이 불거진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한지 묻는 질문은 ‘적합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하지 않다’는 47%였다. ‘적합하다’는 의견은 16%였다. ‘모름·응답 거절’은 37%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37%로 적합하다는 28% 의견을 앞섰다. /서예진 기자 syj@

北 ‘한국발 무인기 침범’에李 수사 지시

靑 “북한 도발·자극 의도 없어
긴장 완화·신뢰 제고 노력 지속”

연초부터 남북이 무인기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북측은 한국 무인기가 영공을 침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측은 “도발 의도가 없다” “군의 무인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대북 관계 진전에 노력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무인기 공방이 향후 남북관계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11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북측을 도

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1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



북한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1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했다. /뉴시스

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도 북측은 우리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무인기가 ‘군사용’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부로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국빈 방문 당시에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당시 중국 측에선 우리 측의 대북 정책에 대해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이 ‘인내심’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난 정부 있었던 일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북한과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과거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차례 비판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현지에서 연 순방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고 엄청난 경제심과 적대심을 유발했다. 사실, 북한은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며 “꽤 오랜 시간 쌓아온 업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예진 기자